eISSN 3140-409X

ISSUE BRIEF

이슈브리프 911호
(2026.11. 2)

2026 미국 중간선거와 AI 가속의 정치적 가격

제911호

양지수 jisooyang@inss.re.kr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AI가 새로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AI를 투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꼽은 미국 유권자는 44%로, 기존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져 온 낙태(46%)나 총기 정책(45%)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자신의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는 데 반대하는 응답은 72%에 달한다. 미국 유권자들은 미국이 세계 AI 개발을 선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데이터센터의 전력비용과 지역사회 부담,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6년 중간선거가 주목되는 이유는 미·중 AI 패권경쟁의 향방에 미국의 국내 정치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AI 가속을 추진해 온 트럼프 정부는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의회 권력구도의 변화를 넘어, 트럼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AI 가속 전략을 어떠한 국내정치적 조건에서 추진하게 될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국내 유권자의 요구와 정치적 평가를 외면한 채 국가전략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AI 가속에 따른 국내적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것인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국제적인 AI 경쟁을 지속하기 위해 치러야 할 정치적 가격인 셈이다.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에는 미국이 AI 주도권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를 유지하면서,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해 AI 가속정책의 추진 조건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AI 가속에 따른 미국의 국내정치적 부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역시 AI 인프라 확충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지역사회의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AI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책임 있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키워드: 중간선거, 인공지능(AI), AI 가속정책, 데이터센터, 정치적 가격

美, 중간선거를 앞둔 AI 비용 논쟁

2026년 11월 3일은 미국의 중간선거일이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10월 8일에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 유권자의 44%는 AI를 중간선거의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꼽았다. 비록 AI가 조사대상 16개 쟁점 가운데 11위를 차지하였는데도 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AI의 순위보다 AI가 선거의 독립적인 의제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중간선거 당시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18개 주요 선거 쟁점 항목에 AI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위 2026년 조사에서는 AI가 낙태(46%)나 총기 정책(45%)과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다.[1] 이는 AI가 기술과 산업의 문제를 넘어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전력비용과 지역사회의 부담은 일부 지역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센터 관련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미 하원은 2026년 6월 18일 발의된 데이터센터의 전력 인프라 비용 부담을 다룬 「요금납부자 보호법안(Ratepayer Protection Act, H.R. 9340)」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9월 16일 통과시켰다.[2] 이 법안은 상원에 접수되었으나, 9월 30일 토론종결 표결에서 필요한 60표(찬성 57표, 반대 43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하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

1) Pew Research Center, "Economy Ranks as Top Issue in Midterms for All Voters – But Partisans Differ Over the Importance of Other Issues", (October 8, 2026),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26/10/08/economy-ranks-as-top-issue-in-midterms-for-all-voters-but-partisans-differ-over-the-importance-of-other-issues/ (Accessed: October 27, 2026); Pew Research Center, "Midterm Voting Intentions Are Divided, Economic Gloom Persists", (October 20, 2022),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22/10/20/midterm-voting-intentions-are-divided-economic-gloom-persists/ (Accessed: October 26, 2026).

2) U.S. House of Representatives, "Ratepayer Protection Act (H.R. 9340)", Congress gov (September 16, 2026).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9340/all-actions (Accessed: October 29, 202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26년 중간선거에 있어 AI 정책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트럼프 정부는 AI 가속의 편익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술 주도권 확보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AI 가속 정책에 따른 비용은 지역과 개인에게 구체적인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요금납부자들은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지역사회는 대규모 인프라의 입지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 역시 AI 자동화에 따른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AI 가속의 편익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반면, 그 비용은 지역과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AI 가속 정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비대칭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중간선거에서 주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 이후 미·중 경쟁 속에서 AI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목표 자체가 쉽게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I 가속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정치적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은 커지고 있다. 결국 트럼프 정부는 AI 주도권 확보라는 국가 전략을 지속하기 위해 국제적 경쟁의 압력뿐 아니라 국내 유권자의 요구와 그에 따른 정치적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I 정책의 국내정치화와 유권자 인식의 변화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미·중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AI 혁신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2025년 1월 바이든 정부의 AI 안전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발표한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에서는 혁신 촉진과 인프라 구축, 국제적 AI 주도권 확보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 개발과 확산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AI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되면서 유권자들의 AI에 대한 평가에서도 비용과 부담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AI가 가져올 경제적 편익과 국가 경쟁력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전력요금 상승과 지역 환경의 변화, 일자리 감소,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의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AI 확산에 따른 개인적 부담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26년 7월 발표된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3%가 미국이 세계 AI 선도국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미국인 77%가 AI 선도국이 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3] 반면 10월 실시된 ABC뉴스·워싱턴포스트·입소스 조사에서는 자신의 지역에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데 반대한다는 미국인이 72%에 달했다.[4] 미국 유권자들은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한 인프라가 실제 자신의 거주 지역에 들어서는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지역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 81%, 무당층 76%, 공화당 지지층 58%로 나타났다. 반대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과반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미국에서도 AI 확산에

3) Pew Research Center, "What Americans think about the global AI race", (July 23, 2026),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6/07/23/what-americans-think-about-the-global-ai-race/ (Accessed: October 26, 2026).

4) ABC News, "Most Americans say AI is bad for society, oppose more data centers: ABC/Post/Ipsos poll", (October 21, 2026), https://abcnews.com/Politics/americans-ai-bad-society-oppose-data-centers-abcpostipsos/story?id=137414085 (Accessed: October 26, 2026).

따른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정당을 가로지르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처럼 정당을 가로지르는 우려가 특정 정당에 대한 뚜렷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2026년 9월 뉴욕타임스·시에나대 조사에서 AI 정책을 더 잘 다룰 정당으로 공화당(42%)과 민주당(40%)이 비슷한 평가를 받았으며,[5] 앞서 언급한 10월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26%, 공화당은 19%로 나타났다. 특히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어느 정당도 AI 정책을 더 잘 다룰 것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조사마다 질문 방식과 대상에 차이가 있지만, 두 조사 모두 AI 이슈가 특정 정당의 지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이슈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AI에 대한 우려는 데이터센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달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등록유권자의 84%가 AI를 미국 노동자에게 위협이 되는 기술로 인식하였다.[6] 데이터센터의 입지와 전력비용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요소라면, AI 자동화에 따른 고용 불안은 산업과 직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실제 지역정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전력과 용수 사용, 환경 부담, 토지이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다. 오하이오주 애슈빌에서는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와 함께 데이터센터 및 발전시설 건설 관련 협약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연방정부가 AI 인프라

5) Axios, "Voters give edge to GOP over Dems on AI", (September 15, 2026), https://www.axios.com/2026/09/15/ai-polling-nyt-sienna-midterms (Accessed: October 26, 2026).
6) Reuters, "Most US voters say Trump, Congress don't take AI risks seriously, Reuters/Ipsos poll finds", (October 7, 2026), https://www.reuters.com/world/most-us-voters-say-trump-congress-dont-take-ai-risks-seriously-reutersipsos-poll-2026-10-07/ (Accessed: October 26, 2026).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개별 사업의 수용 여부는 지역 주민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AI 가속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을 단순히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AI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자신의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반대할 수 있고, AI의 경제적 편익을 기대하면서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정당 간 대립에 그치지 않고 정당 내부와 지역사회는 물론 산업과 직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간선거와 트럼프 AI 정책의 추진 여건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전체와 상원의 약 3분의 1이 새로 선출되는 만큼, 의회 권력구도의 변화는 트럼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AI 정책을 추진할 정치적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대, 기술 수출 등 주요 AI 정책을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의회의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별도 입법 없이 행정부에 정책 방향을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추진에 유리하다. 그러나 AI 인프라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규제체계의 법제화, 연방과 주정부의 권한 조정 등은 행정명령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관련 법률의 제정과 예산 확보에는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며, 행정부의 정책 집행 역시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정부 역시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국내정치적 부담에 대응하고 있다. 2026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AI·클라우드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요금납부자 보호 서약(Ratepayer Protection Pledge)'을 발표하였다. 앞서 언급한 <요금납부자 보호법>도 이러한 취지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였으나, 기업의 자발적 서약과 주 규제기관의 검토만으로는 비용 전가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조치에도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8월 31일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은 낙후되고 가난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간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온 10월 21일에는 데이터센터 기업이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배당(dividend)'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금전적 합의가 이뤄지면 지역사회의 반대도 지지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반대를 비판하던 트럼프 정부가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를 통한 수용성 확보에도 나선 것이다. 이는 AI 가속이라는 국가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비용 부담과 반발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변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권한 관계이다. 트럼프 정부는 통일된 AI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정부의 개별적인 AI 규제를 제한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6년 3월 발표한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는 주정부가 AI 인프라의 입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AI 개발에 대한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통일하려 하면서도, 인프라 입지에 관한 주정부의 권한은 인정하려는 것이다.

평가와 시사점

2026년 중간선거가 미국 AI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자 하는 경우, AI 주도권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AI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AI 가속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비용과 지역사회 부담, 고용과 안전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될수록 기존의 정책 수단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구도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AI 정책은 더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기존 AI 가속정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지역구 유권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도 행정부의 인프라 확대정책과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이 하원 또는 상원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에는 의회가 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부 감독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AI 정책을 제약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기업의 비용 부담과 안전 책임, 노동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행정부에 대한 조사와 청문회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어느 경우든 데이터센터 입지에 관한 주정부와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트럼프 정부는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의회의 지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정치적 제약을 반드시 AI 가속의 장애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인프라 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키거나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과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고 사업의 수용성을 확보한다면 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확대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비용 부담에 대한 충분한 대응 없이 사업 확대만 추진할 경우 지역사회의 반발과 사업 지연이 누적되어 국가전략의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조정은 특히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들은 유권자로서 선거를 통해 정부와 정당의 기존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고, 후보자의 공약을 바탕으로 지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미·중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AI 확산에 따른 비용과 부담이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경우 정부와 정당은 이에 대한 설명과 대응을 요구받게 된다. 이번 중간선거는 AI가 새로운 투표쟁점으로 등장한 가운데, 미국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향후 미국의 AI 정책뿐 아니라 세계 AI 발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나타나는 미국 시민들의 AI 정책에 대한 선호와 정치적 선택은 향후 미국의 AI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그 파급효과는 우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도 미칠 수 있다. 이는 타국의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수록 해당 국가의 국내 상황 변화까지 자국의 AI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줄이고 핵심 AI 역량을 자율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버린 AI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는 AI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평가를 반영하는 과정이 AI 가속을 제약하는 요인에 그치지 않고, 국가 AI 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주도권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가 정책의 비용과 부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AI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함으로써 '책임있는 AI 강국'으로 지속 가능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